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6 월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135호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 행정에 관

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 나. 점자도서관
 -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2 이하인 사람
 -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 제17조(출처 명시 방법)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었던 것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과 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

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 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

제23조(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제25조(신청주의)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등록신청)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분실·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사항의 경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

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할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의 직권말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문서에 의한 저작권등록 등)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자문서로 작성·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것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춘 것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종류
2. 인증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인증 절차 등)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복제권자의 표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복제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시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시 및 복제권자의 집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

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14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목록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제52조(보고)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법 제10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50만원으로 하고, 법 제10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으로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

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저작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장을 제외한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1조(조정절차 등) ①법 제114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

여야 한다.

③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저작권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저작권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조정 of 불성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 요청과 관련된 저작물의 사본
2. 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저작권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저작권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5조(저작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저작권위원회에는 사무처, 저작권연구원, 저작권교육연수원 및 해외저작권센터(이하 “사무처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사무처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조직·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정보센터는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수집하고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편리한 검

색·활용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①저작권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저작권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저작권위원회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제69조(수거·폐기 절차와 방법)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제70조(수거·폐기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수거·폐기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 업무를 할 때 문화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72조(삭제 또는 중단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삭제 또는 중단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중단을 명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삭제·중단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4조(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5조(기증 절차) ①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주장자의 소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유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8101호, 2006.12.28. 공포, 2007. 6.29. 시행)됨에 따라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송 시의 복제방지조치 및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금수령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목적 등(영 제7조 및 제8조)

- (1)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후에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미분배 보상금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홍보 및 연구,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3)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 등(영 제9조)

- (1)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교육기관이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에 받는 자 외에는 이용·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3) 교육기관 등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함으로써 교육기관 및 수업을 받는 자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 범위(영 제11조)

- (1)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등을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기존의 무도장, 호텔 등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무도학원, 모텔 등을 추가함.
- (3)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대상자 간의 형평을 꾀하고,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 전송 차단 조치(영 제45조 및 제46조)

-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청 방법 및 기술적인 조치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권리자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 요청서에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 비교를 통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와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등의 절차(영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1)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하거나 삭제·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공무원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수거·폐기한 경우에는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하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를 폐기하도록 하고, 저작권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심의를 요청받으면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함.

(3)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불법 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홍 수
농림부장관

◎대통령령 제20136호

농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